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593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27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이성권 · 서일준
이만희 · 김기현 · 박성훈
김용태 · 주호영 · 신동욱
윤상현 · 조배숙 · 한기호
박정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,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기소 전 몰수·추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·추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·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
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86조(비밀유지) ① 세무공무원 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(이하 “과세정보”라 한다)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86조(비밀유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</u> <u>. 추정보전명령을 신청하기</u> <u>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</u> <u>경우</u></p> |
| <p><u>10.</u> (생략) ② ~ ⑥ (생략)</p> | <p>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